

광주교육청, 행정통합에 일선 우려 경청... “법안에 반영”

광주교육청이 최근 급물살을 탄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교육계 우려·제안을 경청하고 통합 특별법안에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14일 오전 청사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현황 공유 교육가족 간담회’를 열었다.

앞선 지난 12일 광주·전남교육감이 발표한 ‘행정통합 공동 선언’ 이후 교육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현재 준비 중인 행정통합 특별 법안에 교육계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정선 시교육감을 비롯한 시교육청 공직자와 각급 학교 교장·행정실장 대표, 교원 단체·노동조합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 행정·일선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시 교육행정 독립성 확보 방안, 지역 간 교직원 인사 교류·처우 문제 해결, 교육예산 배분 형평성 등 통합에 따른 교육 현안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행정통합으로 인해 교육자치가 약화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도 갖춰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의 미래와 교육 현장의 안정성이야. 제안받은 인사·행정·예산 관련 의견이



광주교육청은 14일 오전 청사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현황 공유 교육가족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광주교육청제공

각급 학교·교육단체·노동조합 대표 초청 간담회 “통합 과정서 교육행정·인사·재정 등 두루 숙고”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육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인 만큼 통합 이후에도 교육의 전문성·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는 선진형 통합 모델을 만들 것이다. 앞으로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민주적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조만간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최종 도출한다. 이에 앞서 행정통합의 중요한 축 중 하나인 ‘교육 자치’ 부분에 대한 시도지사·시도교육

감 4차 합의문도 이날 오후 발표한다.

앞으로 특별법안은 국회에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이후 중앙부처와 국회 협의를 거쳐 2월 내 특별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에서는 통합 특별시장과 교육감을 선출하고 7월1일 320만명 규모의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다.

/염선호 기자

전남도,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청년층까지 확대 추진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청년층 신청 가능 버섯류·산나물류 등 임산물 구매 품목 추가

전남도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식료품 구입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지속 가능한 농식품 소비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신부·영유아·18세 이하 아동을 포함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34세 이하 청년층(기준 중위소득 32% 이하)까지도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1인 가구는 월 4만원, 4인 가구는 월 1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원은 사업신청일 기준 해당 월부터 제공한다.

발급된 농식품 바우처 카드는 국산 과일류·채소류·흰 우유·신선알류·육류·잡곡류·두부류·임산물 등 8개 품목에 한정해 사용 가능하다. 올해부터 임산물 품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수실류·버섯류·산나물류를 구매할 수 있다.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는 농림축산

식품부(aT)가 지정한 마트·로컬푸드 등 오프라인 매장과 농협몰·남도장터 등 온라인 매장이며,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월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 잔액은 농식품 바우처 지원 금액의 10% 미만까지 이월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최대 4000원, 4인 가구는 최대 1만원을 이월·사용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올해 이달부터 12월까지이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과 전화로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수급 가구로, 현재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이 신선한 농식품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권철 기자

전남자치경찰위, 고령자 안전한 이동환경 조성 운임 설문조사 바탕으로 안전시설 개선·맞춤형 안전관리정책 추진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고령화된 주민의 이동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진행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안전시설 개선, 고령 운전자 맞춤형 안전관리 정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3년간 고령자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여수·나주·담양·영암 등 전남 4개 시군의 65세 이상 고령자 220명을 대상으로 1대 1 대면조사 방식으로 지난해 11월 한 달간 진행했다. 조사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고령자들이 보행 중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는 장소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37.3%)와 이면도로 등 작은 도로(33.6%) 순으로 나타났다. 야간 보행 시 위험을 느낀다는 위험 체감률은 36.9%로,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와 야간 보행로 조명 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에 대해서는 운전자 책임이라는 인식이 79.1%로 가장 높아 운전자 중심의 교통안전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 확대(70~65세)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3.6%로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면허 반납 시 선호하는 혜택으로는 택시비 지원이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나 경제적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안전 교육 방식으로는 방문형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55.5%로,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중심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령자가 실제로 위험을 느끼는 환경과 정책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신호기·조명 등 안전시설 개선, 지역 공동체와 연계한 홍보·교육 강화, 고령 운전자 맞춤형 안전관리 정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남도 교통안전 정책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76.3%에 달해 생활 속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해서 강화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평가됐다.

정순관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체감하는 교통 불편과 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사 결과에 기반해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광주·전남통합 여파 궁금한 시민들... 당국 답변은 원론적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둘러싸고 시도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제도 변화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답변이 원론적 수준에 머물면서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오전 10시 기준 ‘광주·전남 대통합 시도민 소통 운영 플랫폼’에는 총 74건(광주 34건·전남 40건)의 질의가 올라왔다. 일부 입장 정리가 필요한 사안을 제외한 대부분 질의는 답변이 완료된 상태다.

한 시민은 시도 행정통합이 공무원 채용 전반에 미칠 영향을 놓고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의 부모라고 밝힌 이 시민은 “수험생들은 통상 매년 2월 해당 지자체의 명의로 공고되는 시험 일정을 기준으로 준비한다”고 말했다.

이와 “공고 이후 수개월 만에 통합 지자체

광주·전남 통합... 시도민 우려·문의 잇따라 통합 소통플랫폼엔 원론적 답변만 ‘답답’

체가 출범한다는 이유로 올해 합격자까지 통합 기준을 적용해 임용·발령 범위를 변경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며 “이는 그동안 수험생 개인의 준비 과정은 물론, 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특정 지역 발령을 전제로 준비해 온 2026년도 수험생들의 경우 과도기적으로 기존 체계를 유지하고, 통합 교육청 출범 이후 새롭게 공고되는 시험부터 단계적으로 통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무직 채용 과정을 묻는 한 시민은 “행

정통합이 추진 중인 올해 상반기 공무직 채용은 기존대로 진행하는 것인가. 거주지 제한이 있던 공무직 채용 범위가 늘어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통합 이후 공무원 노조 운영 방식을 두고 한 시민은 “통합 이후 시도 공무원 노조는 동일 기관 내 복수 형태로 병존하면서 단계교섭은 법령에 따라 운영된다는 답변이 있다”며 “노조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우려되는 장구 단일화나 노조 간 의견 조율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물었다.

이밖에 광주와 전남 간 차등 지원되고 있는 출산지원금,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

는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요금에 대한 향후 방침을 묻는 질문도 있었다.

시도 행정당국은 대부분 질의에 “특별법 마련 단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만 내놓고 있다.

행정통합 이후 시도별 지원사업 대상과 범위와 관련해서는 “법률 검토와 합의 과정을 거쳐 시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공무원 처우에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법 내 핵심 사항”이라거나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질의에는 “권역별 설명회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등 원론적 입장이 반복됐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중앙부처와 국회 협의를 거쳐 2월 내 특별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에서는 통합 특별시장과 교육감을 1명씩 선출하고 7월1일 320만 시·도민과 함께하는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다. /전민규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